

데스크칼럼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면 오는 7월 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있었지만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하면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텅텅 비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위기는 자치제도 간격을 뒤흔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은 권한은 제한된 채 책임만 강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4년 기준 24.4%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지방정부에 창의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견지도 못하는 데 뭐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위기는 자치제도 간격을 뒤흔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은 권한은 제한된 채 책임만 강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4년 기준 24.4%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지방정부에 창의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견지도 못하는 데 뭐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기고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했지만, 학교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지연화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관계 맺기의 결핍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창 도래와 부대끼며 소통의 기술을 배우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하고 격리해야했고, 모니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만났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공유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연습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교육부의 2024~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피해 응답률은 매년 상승해 2.5% 인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5.0%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신체적 폭력보다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같은 '정서적·관계적 폭력'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계 형성에 서툰 아이들이 오해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면서 생겨난 비극이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치유하기 힘든 깊은 마음의 흉터가 아이들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는 촘촘해졌는데, 왜 아이들은 여전히 비랑 끝으로 내몰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한 존재의 생명력과 그를 지탱하는 세계인 가

전대미문의 행정통합과 일자리 창출

이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런 위기에 대처하고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새 틀을 짜야 한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광역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플랜타임'이라는 절박감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통합이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질지는 알 수 없다. 전적으로 지역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역량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설계를 비롯해 △집행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광역 간 통합 절차와 특례 부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주민 의사 수렴 등 속의민주주의를 위한 절차 보완이다.

사실 이번 통합은 허점투성이다. '선(先)통합 후(後)합의'를 내세우면서 우선 통합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에 가자고 했으니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조율하는 진짜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누가 통합특별시장이 돼도 향후 4년 동안 기관들 사이에 업무 조정하고 정책 조율하면서 지역민의 견 수렴하고, 지방의회 실효하는데 시간을 다 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통합특별시의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과제는 경제와 일

자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의뢰로 알앤씨치가 지난달 21~22일 광주·전남 거주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기대효과' 1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26.8%)로 조사됐다. 통합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능력'(36.1%)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집중 속에서 유소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지방대학이 입학 감소로 문을 닫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처방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도 성장' 구도를 '지역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유소년과 청년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보고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AI(인공지능)산업은 5년 이내 경쟁구도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들 아는 얘기지만 전력 없이 AI 강국은 없다. 당장 AI산업을 이끌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소형모듈원전(SMR) 상업화를 추진하지만 실용화는 오는 203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은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의 가처 전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에너지믹스'가 요구된다. 삼성, SK, LS 등과 지역 내에 AI데이터센터와 RE 100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18개월이 소요되는데 안전한 전력 확보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이제는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한다

정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사안 발생 이후의 과정이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국가와 학교의 보호를 기대하며 도움을 청하지만, 이들이 만나는 현장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법적 절차와 행정적 안내뿐이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는 공간에서 피해 가족은 치유의 주체가 아닌,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주체로 전락한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쏟아지는 질문들은 피해 가족에게 고통을 줌 또 다른 가해가 되기도 한다.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니?',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원인은 없었니?'와 같은 질문들은 피해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더 키우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력감을 낳는다. 법적 절차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 정교한 소외의 피해 가족을 사회적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에서 어떻게 사과받고, 용서하고 회복할 것인가로,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시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어 붙일 것인지 묻는 치유와 회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찾아볼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피해 학생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을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법적 절차 이전에 관계회복 속력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시도들은 학교폭력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변화에서 여전히 간과하기 쉬운 핵심이 있다. 바로 피해 학생 곁에서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가족에 대한 돌봄이다. 학교폭력은 당사자 한 명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의 웃음이 사라진 거실은 순식간에 적막으로 뒤덮이고, 부모의 삶 또한 아이의 소용과 치료로 집중하게 되어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다.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 체계인 가족이 건강해야 한다.

가족이 심리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는 어떤 훌륭한 학교 복구 프로그램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피해 학생 개인을 넘어 그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맞춤형 가족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가정 내 애착 관계를 재건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경험이 있는 부모가 또 다른 피해 부모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방식은 법적인 배상으로 채울 수 없는 정서적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을 다시 웃게 하는 힘은 결국 상처 입은 가족 전체를 돌보는 세심한 손길에서 시작된다. 처벌의 끝이 아닌, 관계의 시작을 바라보는 교육적 접근을 기저로 한 사회적 설계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진정한 봄이 찾아올 것이다.

사설

'통합특별시' 2차 공공기관 집중배치해야

우리나라 제1호 광역자치단체 통합모델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광주·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전남·광주특별시'를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핵심 기관 집중 배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진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겠다"며 이를 재차 확인했다. 또 "이번 이전은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적화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로의 공공기관 집중 이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유치 목표 핵심 기관 10곳 등 40개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핵심 유치 대상들은 단순한 큰 기관이 아닌, 농수산, 에너지, 인공지능, 항공 등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된 기관들이다. 즉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연계된 기관의 집적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중흥의 이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에너지공과대학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연구와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어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광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공공기관 유치 대상이 정부의 기본 방침에 완전히 부합돼 있다는 얘기다.

진도 대파 스마트화로 상품성·소득 높인다

'대한민국 대파 산업 중심지'인 진도군이 95억원 규모의 관력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노지 육성지구)'에 선정된 것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농식품부가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발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 농산물 공급안정과 발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49억여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 서진도·선진·진도농협과 협력해 7개 읍·면에 500ha 규모의 스마트 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또 농업용수 공급 시설과 무선통신망 등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관수와 관비 자동 공급 시스템, 병해충 통합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24년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까지 총 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선별, 포장, 가공, 유통을 연계하는 유통물류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디지털 물류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 두 사업을 연계해 대파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를 스마트화하기로 했다.

사실 진도군은 대파 재배 면적이 1052ha로 전국의 9.5%, 전남의 36.1%를 차지하는 대파 주산지다.

기름진 토양과 따뜻한 기온, 해풍 덕분에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춰 진도 대파는 육질이 단단하고 알만 등의 아미노산 성분이 높아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하다. 곧은 줄기, 풍부한 식이섬유, 치밀한 조직으로 저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배 생산비가 높고 수확·유통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데다 남부 지역 특성상 3~4월 출하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번 노지 육성지구 선정이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진도 대파 산업의 체계를 스마트 기반으로 전환, 상품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이제는 '비전 경쟁'이다

이현규

정치부 부장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심으로 1차 문턱을 세우고, 최종 선택은 민심까지 함께 반영하겠다는 구조다.

경선 방식만 놓고 보면 특별히 낯설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결이 다르다. 40년 동안 별도의 행정체제로 움직여 온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이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단체장을 뽑는 절차라기보다 '통합 이후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경선 과정에 '정책 검증' 장치를 여럿 넣었다.

보경선에서는 북부·동부·서부 권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열고 순회투표를 병행한다.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특별시의 산업 전략과 행정체계, 균형발전 구상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연설과 토론은 생중계돼 시민과 당원들이 동시에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거론됐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대신 '정책배심원단'이 별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연설회 현장에서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과 통합특별시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공개 정책 검증 패널에 가까운 장치다.

경선 규칙과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후보들이 어떤 내용으로 경쟁하느냐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정부로 출범하는 이번 선거는 행정체계 통합과 권역 균형발전, 산업 구조 재편 등 여러 과제가 동시에 걸린 선거다. 초대 단체장이 어떤 구상을 내놓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출발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복잡한 틀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청사진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미래를 보여주느냐가 시민들의 선택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